

제4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

의결안건(제42-1호)



새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(안)

2022. 6. 30.

관계부처 합동

목 차

I. 추진배경 및 경과	1
II. 국내외 ODA 주요 이슈	2
1. 국제 이슈	2
2. 국내 이슈	3
III. 새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및 과제	4
1. 전략적 ODA 추진	4
2. 패키지화·대형화·브랜드화	5
3. 선순환 ODA 생태계 조성	6
4. 추진방식 선진화	7
IV. 향후 계획	9

I. 추진배경 및 경과

- 새정부의 ODA 국정과제를 토대로 향후 5년간 추진할 ODA의 기본방향 및 정책과제를 마련하여 '글로벌 중추국가'의 국정비전 달성
 - '21년에 수립한 「제3차 종합기본계획(‘21~’25년)」 중 새 정부의 국정 기조에 맞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부분 중심으로 구체화

< 새정부 ODA 국정과제 주요 내용 >

- √ (국정비전 : 글로벌 중추국가)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글로벌 협력을 증진하여 세계적인 문제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국가 지향
- √ (국정과제 :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) '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추진'을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(SDGs) 및 글로벌 가치 실현에 기여
- √ (세부 추진과제) △국격에 걸맞은 ODA 확대 △글로벌 가치 실현을 위한 선진적·전략적 ODA 추진 △ODA 선진화 및 혁신역량 강화 △국민과 함께하는 ODA 추진

- 팬데믹, 기후변화 및 분쟁 등 쏠지구적 도전과제에 대해 ODA를 통한 선도적 협력으로 글로벌 리더 국가로의 한 단계 도약 절실
 - 추진체계 구축, 연계 강화, 규모 확대 등 지난 정부들의 성장 단계를 계승하면서도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한 차별화된 방향 제시 필요

< 지난 정부의 ODA 정책 추진내용 >

- √ (이명박 정부) △G20 서울정상회의,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등 통해 글로벌 개발협력 논의 주도 △체계적 ODA 추진 위한 기본법 제정, 위원회의 법정 기구화 등 추진체계 정립
 - √ (박근혜 정부) △ODA 유·무상 연계 강화 통해 원조 통합성 제고 노력 △타 분야 정책과의 연계 확대(과학기술 ODA, 녹색 ODA, 문화 ODA 등)
 - √ (문재인 정부) △ODA의 통합적·효율적 추진을 위한 통합체계 구축(기본법 전부 개정) △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을 위한 분야별 ODA 전략 추진 △규모 대폭 확대(1.5배↑)
- ⇒ 새 정부에서는 전략적 ODA, 생태계 조성, 추진방식 선진화 등 중점 고려 필요

- ODA 관계부처와 공공기관은 물론, 분야·지역별 전문가 및 시민 사회, 학계 등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방향(안) 마련
 -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(6.22)에서 사전 논의

Ⅱ. 국내외 ODA 주요 이슈

1 국제 이슈

- **(보편적 가치 위협)** 기후변화, 에너지·식량 위기, 분쟁 등 복합적 위기 상황 下 인권, 자유, 평화 등 인류 공동 가치 훼손 우려
 - *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식량 가격 23% 폭등 전망, 가격 1% 인상시 1,000만명이 고통('22년, WB)
 - 특히, 지속가능발전목표(SDGs) 채택('15년) 이후 '20년에 처음으로 SDG 이행 지수 하락*으로 국제사회의 이행 가속화 요구 증대
 - * ('15~'19년) 매년 평균 0.5p 상승 → ('20~'21년) 0.01p 하락('22년, SDG 보고서)
- **(자원 부족)** 코로나19 팬데믹으로 ODA 수요는 대폭 증가했으나, 국제사회의 가용 개발재원은 감소하여 2030년까지 SDGs 달성에 한계*
 - * 코로나19로 개발자원 부족액이 연간 2.5조불 → 3.6조불로 증가('22년, UNCTAD)
 - ODA를 통한 국제적 연대(solidarity) 강화와 함께, 자원 확보를 위한 다양한 개발자원 제공 주체와의 다각적 협력 확대 필요
 - * 미국의 DFC, 네덜란드의 FMO, 독일의 DEG 등 주요 공여국은 개발금융기구(DFIs)를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 및 개발자원 확대 추진(ODA를 민간자원 유인의 촉매제로 활용)
- **(국익 우선주의)** 선진국은 자국 내 경제여건 악화로 개도국과의 협력도 자국의 대외경제와 외교·안보 전략의 연장선에서 추진
 - 중국의 일대일로, G7의 더 나은 세계 재건(B3W)* 등 공여국들의 원조 경쟁 속에서 우리도 대외정책과 ODA를 전략적으로 연계 필요
 - *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이 주도하는 가치 중심적이고 높은 수준의 투명한 인프라 파트너십 표방('35년까지 개도국에 약 40조 달러 규모의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자원 지원)
- **(한국에 대한 기대)**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강화*로 한국 ODA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와 개발협력 수요 크게 확대
 - * △ UNCTAD, 선진국 지위 부여('21.7월) △ G7 정상회의 2년 연속 초청('20, '21년)
 - 특히 OECD, UN 등에서는 개도국 팬데믹 위기 회복의 핵심요소로 '디지털 전환'을 강조하고 있으며, 한국의 선도적 역할에 주목 중
 - * 전세계 디지털화 양자 ODA 비중: **(韓) 18.2%** (美) 13.4% (EU) 11.5% (獨) 10.6% ('22.1, OECD)

- **(한국 ODA 정체성 확립)** 높아진 국가 위상에 걸맞게 빠른 추격자 (fast follower)에서 선도자(first mover)로 차별화된 방향성 논의 필요
 - 다수의 시행기관이 여러 국가와 영역에 소규모 사업 중심*으로 추진하여 우리 ODA 사업에 대한 현지 인지도가 낮은 편
 - * 10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 비중(%) : ('17) 69 → ('18) 70 → ('19) 68 → ('20) **70** → ('21) **68**
 - 단시간에 최빈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국가로서 우리의 발전 경험과 비교우위를 고려한 한국 ODA 시그니처 사업 발굴 필요
 - * '12년에 ODA 추진역량, 수원국 수요 등을 기준으로 한국형 ODA모델 기본프로그램 40개를 선정하였으나, 후속 관심 부족 등으로 성과 미흡
- **(디지털·민간 역할 강조)** 새 정부는 '디지털플랫폼 정부'와 '규제 혁신을 통한 민간효율 증진'을 중점 추진하는 바, ODA도 동참 필요
 - ODA 플랫폼의 낮은 디지털 수준 및 이원화된 체계로 시스템 활용의 편의성 부족*, 제공 정보의 부족 및 비정형 데이터**와의 연계 미흡
 - * ('21년, 시행기관 대상 설문조사) 현 시스템이 사업정보 모니터링 및 통계조회에는 유용하나, 기관간(유·무상) 연계, 평가관리, 결과 환류 등 데이터의 활용 측면에서 만족도는 평균 이하
 - ** 동영상, 음성정보 등 코로나19로 인한 원격 사업 수행으로 비정형 자료 증대
 - ODA 규모의 비약적 성장에도 불구하고, 취약한 민간 참여 유인구조로 풀타임(full-time)·중견 전문가가 적고*, 전문기업의 성장에 한계**
 - * 최저가 낙찰제와 낮은 조달 단가, 부처별 상이한 단가구조 등 각종 규제로 민간의 참여 제약 → 대학·공공기관의 겸업(Part-time) 인력, 초급인력 및 시니어 중심 ODA 수행 비중 증가
 - ** 개발컨설팅 전문 민간업체 : 일본 약 80개('21년) vs 한국 10여개
- **(내실화 요구)** 우리 ODA는 양적 성장과 함께 역량 강화 및 추진방식 혁신을 통한 질적 내실화를 달성해야 할 전환점(pivotal point)에 도달
 - 그간 ODA 규모와 참여자 수가 크게 증가*한 것에 비해 참여자 역량, 기관간 및 민·관 협업 확대 등 질적 개선 노력은 부족한 편
 - * '10년 대비 '22년의 예산 규모 3배 증가(1.3 → 4조원), 시행기관 수는 1.6배 증가(27 → 44개) 등
- **(국민 지지)** ODA 규모 확대와 함께 지속가능한 ODA 추진을 위해 국민의 공감과 지지 확보가 중요하나, 인지도 및 지지도는 정체* 상태
 - * ODA 인지도(%) : ('15) 53.2 → ('17) 63.0 → ('19) **62.0** → ('21) **64.3**
 - ODA 지지도(%) : ('15) 83.6 → ('17) 86.7 → ('19) **81.3** → ('21) **76.0**

Ⅲ. 새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 방향 및 과제

< 새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>

- ① 전략적 ODA 추진
- ② 패키지화·대형화·브랜드화
- ③ 선순환 ODA 생태계 조성
- ④ 추진방식 선진화

- ▶ 국제적 책무를 다하는
신뢰받는 국가
- ▶ 제도 및 시스템 혁신 통해
달고 싶은 ODA 모범 국가

글로벌
중추국가
실현

1 전략적 ODA 추진

□ 세계 10위권 ODA 국가로 도약

- **(규모 확대)** G10 위상에 걸맞게 공적 재원의 양적 확충* 및 민·관 재원 융합 등 재원 다양화**를 통해 총 ODA 규모를 세계 10위 수준으로 확대
 - * (21년) 우리 ODA 총규모는 28.6억불(29개 회원국 중 15위), ODA/GNI는 0.16%(25위)
 - ** (공공재원 ODA) 저소득국·최빈국 위주/ (민·관 융합) 대규모 인프라 수요 많은 중소득국 이상
- **(국제협력 고도화)** 다자개발회의(UN, MDB 등) 논의*에 주도적 참여, 공여국과의 전략적 협력** 등을 통해 국제사회 속 영향력·가시성 확대
 - * 유엔개발시스템(UNDS) 활동의 일관성 및 통합성 강화를 위한 개혁 이행에 대해 지속 지지 등
 - ** 주요 공여국과의 개발협력정책협의회 확대, MIKTA 등 신흥공여국과의 삼각협력 추진 활성화 등

□ 글로벌 가치를 선도하는 선진공여국 위상 정립

- **(가치실현 기여)** SDGs, 인권, 평화 등 보편가치에 기여하는 개발 협력 추진을 통해 포용적 국제질서의 중추 국가로 도약
 - * UN의 「인도적 대합의(20년 가입)」 권고사항 준수 및 OECD DAC의 「인도적지원-개발-평화 연계 권고안(19년 채택)」 이행 등, 나아가 국제규범 형성에 실질적 기여
- **(의제 선도)** 디지털 전환, 그린, 보건·의료 등 비교우위 분야 의제에 대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주도하여 선도 국가로 발돋움
 - * 개발협력 핵심 의제별로 임기 5년간의 로드맵(정상회의 계기 의제 선도,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 추진, 국제기금 신설 등)을 마련, 체계적 추진으로 가시적 성과 조기 창출

□ 대외정책과의 연계 강화

- **(대외정책 반영)** 신규 ODA 사업을 우리의 전략적 가치가 높은 지역·분야 중심으로 추진*하여 ODA와 대외전략의 시너지효과 창출
 - * 인도-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가입 등 대외전략이 구체화되면 지역별(아프리카, 아세안 등) 및 분야별(교육, 농업 등) ODA 전략 수립시 우선 반영 등 사업-정책간 정합성 제고
- **(환경변화 적시 대응)** 수원국의 전략적 중요성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*, 중점협력국 대상 중간평가 실시 및 재조정 검토
 - * 글로벌 공급망 및 우리와의 외교·경제적 협력잠재력 등 대외환경 변화 모니터링 → 중점협력국 지정 2년 후 중간평가 실시, 점수변동이 큰 국가 위주로 재조정 검토
- **(정상외교 지원)** 정상급의 다자외교 및 개도국 양자외교시 ODA를 주요 의제로 기획하여 ODA 추진동력 확보 및 외교성과 극대화
 - * 정상외교 후속조치 신속 추진 및 수원국의 긴급수요 적시 대응을 위한 전략사업비 확대

2 패키지화·대형화·브랜드화

□ 연계사업 활성화

- **(패키지화)** 정부-민간(기업·NGO), 양·다자, 유·무상 원조의 역량을 결집하여 분절성 극복 및 전·후방 사업 연계효과 최대화
 - * (예) 이집트 철도 현대화 패키지 : (유상) 철도 전자연동시스템 구축 및 제반 인프라 개선 + (무상) 철도 전문인력양성 및 운영지원 + (기업) 철도건설 기술 노하우 공유 + (NGO) 안전캠페인
- **(혁신적 개발협력사업 확대)** 기업의 혁신적 기술 및 ESG 활동과 연계*한 ODA 사업 발굴을 통해 ODA 경쟁력 강화 및 기업 이미지 제고
 - * 산업별(금융, 그린바이오, 친환경제조 등) 기업 니즈 분석 및 연계 모델 구축을 위한 컨설팅 지원 등

□ 사업규모 대형화

- **(대형화)** 성과 기반으로 사업의 선택과 집중*, 개도국의 인프라 개발 수요에 맞춘 대형사업 확대 발굴 등 사업규모 대형화 추진
 - * '22년 1,765개 ODA 사업 중 10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이 1,155개(65%)

- **(민간재원 활용)** EDCF와 경협증진자금(EDPF) 연계 등 혼합금융 통한 대형인프라 개발 지원* 촉진으로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 확대
 - * (예) 인도네시아 카리안 물공급 사업(총 8억불 규모) : 카리안 댐 건설(EDCF, 1.4억불) + 카리안댐-정수장까지 도수로 건설(EDPF, 2.1억불) + 정수장 건설(민관협력사업, 수자원공사 참여)

□ 한국형 ODA 브랜드화

- **(브랜드화)** 수원국 수요·여건에 맞춰 우리의 발전경험 활용, 개도국 발전에 실질적 임팩트가 있는 지원을 '한국형 ODA 브랜드'로 정립
 - △ 수원국 수요 △ 지속가능성 △ 차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

< 예 : '한국형 디지털 ODA' 모델 >

- ✓ **(수원국 수요)** △ 아프리카의 인터넷 보급률 33%(유럽 87%) △ 저소득국 인구 60%가 인터넷 계정이 없음 △ 과학기술을 SDGs 달성의 핵심과제로 제시(UN)
- ✓ **(지속가능성)** 수원국 역량(수용성)에 따라 단계적·체계적 디지털화 지원 및 후속 협력사업과의 높은 연계가능성
- ✓ **(차별성)** △ 20여년간 성공적으로 추진해온 전자정부 노하우·경험 △ OECD 디지털 정부 지수 1위, 블룸버그 혁신지수 1위 등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역량

3 선순환 ODA 생태계 조성

□ 개발협력 분야 민간의 역량 강화 지원

- **(민간 활용)** ODA 발주의 상당 부분을 공공이 수주하는 현 체계*에서 전문가·기업의 역할을 대폭 확대**하여 민간 효율성 적극 활용
 - * (예) ODA 서비스 조달시장 : 자본력(자체수입 vs 세금), 신용 등 여러 측면에서 불리한 스타트업, 민간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동일한 잣대로 경쟁 → '기울어진 운동장' 개선
 - ** 사업 기획단계부터 전문성을 갖춘 민간부문이 참여하여 공공기관의 부족한 점(상이한 ODA 추진역량, 순환보직 등) 보완, 현장 전문가의 소통 채널 구축 통해 ODA의 질 제고
- **(기업 육성 지원)** 개발컨설팅 기업의 성장 기반 조성* 및 국내외 ODA 조달시장에 대한 기업 진출 지원**, 현장 애로 규제혁신***
 - * 개발협력 소과정에서 필요한 지식·기술·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고부가가치 지식산업 → 관련 협회 설립 지원, 정부-협회간 협의체 통해 기업 애로사항 해소 및 협력방안 모색
 - ** 정부와 기업간 소통 플랫폼 운영, 개발협력과 기업의 ESG 연계 지원 강화 등
 - *** 조달 단가 현실화 및 표준화, 입찰 최저가격기준 상향(저가 투찰 방지), 사후증빙 간소화 등

- **(중·고급 인력 양성)** 체계적인 ODA 교육과정 관리*, 전문인력 DB 활성화, 단계별 취·창업 역량 지원 등을 통해 중견 경력자 양성**
 - * ODA 입문자와 경력자 대상 단계별 역량 강화 및 교육단계부터 ODA 분야의 노동시장 진출까지 순 과정에 걸친 인력수급 관련 종합 정보 실시간 공유 등
 - ** 기존 정책이 해외봉사자 위주 초급 인력 공급에 초점(21년 KOICA 영프로페셔널 최고 경쟁률 119:1)→ 초급인력의 중견 전문가로의 경력 사다리 지원(전문가 등급체계 개선 검토 등)

□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강화

- **(협업기반 강화)** 범정부 대화채널 통해 협업 단계별 프로그램 개발 및 참여 환경 조성, 제도 정비 등 정부-시민사회간 협력 공고화
 - * '정부-시민사회 정책협의회'를 통해 기본정책 이행과제 점검·보완 등 파트너십 내실화 추진
- **(시민사회 전문성 활용)** 시민사회 강점 분야(인도적 지원·보건 등)에 대한 협력 강화 및 수원국 NGO와의 협력 등 현장 중심 지원 확대

□ 대내외 지지와 인지도 제고

- **(홍보강화)** 통합홍보 제도화, 세대별 차별화된 홍보전략 및 수원국별 맞춤형 메시지 발굴로 우리 ODA에 대한 대내외 인식 제고
 - * '통합홍보 TF'의 정례적 운영, '개발협력의 날(11.25)'을 한국 ODA 대표 통합행사로 안착, ODA 우수사례 정례적 선정·발표 및 신규 BI(Brand Identity)의 적극 활용 통한 ODA 가시성 강화
- **(통계관리)** 국제 원조투명성기구(IATI) 정보 공개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*하여 원조 투명성 제고, OECD DAC와의 통계협력 강화
 - * 현재 IATI 42개 항목 중 31개 항목에 대해 공개 중(IATI가 지정한 의무공개 항목은 13개), IATI 총회 논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공개항목 점진적 확대 추진

4 추진방식 선진화

□ ODA 전 주기 디지털화

- **(디지털플랫폼 구축)** 이원화된 'ODA 통합정보포털(사업담당자 대상)'과 'ODA KOREA(대국민)' 시스템 통합 및 사용자 친화적 시스템 고도화*
 - * △데이터 품질 제고(오류 개선을 넘어 정보의 정확성·가시성 강화) △공개시기 및 범위 세분화에 따른 입력정보 확대 △키워드 검색역량 개선, 영상 등 비정형 정보의 데이터화 등

- **(프로세스 혁신)** 사업정보 뿐만 아니라 일자리, 인력 DB 등 ODA 데이터를 집적하여 첨단기술(AI 등) 활용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업무 효율화*
 - * 단위사업별·담당자별 코드화, 주변 정보(기존·유사사업 정보 등)와 연계 등을 통해 사업 진행의 흐름을 한눈에 쉽게 파악 → 통합 포털을 통해 전반적인 사업관리 가능

□ ODA 성과관리 강화

- **(평가실효성 제고)** 자체평가와 위원회평가 간 상호 연계 등 통합적 성과관리 강화* 및 평가제도 개선 등 실질적 환류 기능 제고**
 - * 자체평가 및 기관역량진단 등을 통해 각 기관의 ODA 사업 전반에 대한 성과관리 역량 강화
 - ** (例) △(자체평가) 개별사업 중심 → 사업운영상 개선과제 도출, 유사 사업 시행기관과 정보 공유
△(위원회평가) 국가분야 등 종합평가 → 넓은 범주에서 유형별 특성에 맞는 성과지침 제시
- **(성과관리 체계화)** 사업 기획 단계부터 성과지표 구체화*하고 사업 심사·조정시 이를 검토·반영함으로써 성과 기반 관리체계 구축
 - * 관계기관간 협의를 통해 성과지표 점검 대상 신규사업 선정 → 평가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점검단의 기관별 점검 실시 → 미흡지표에 대한 컨설팅 지원

□ ODA 업무체계 내실화

- **(통합제도 인착)** 「국제개발협력법」 개정(20.11월 시행) 취지*에 부합하도록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업무체계 전반의 혁신 및 제도화 실현**
 - *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통합·조정 기능 강화 및 주관기관의 소관분야 정책·사업 관리 강화
 - ** '제도개선TF' 운영 검토 : △(목적) ODA 관련 제도 개선, 관련기관간 역할·기능 분담
△(시기) 매년 하반기(7~12월) 집중 운영 △(구성) 국조실, 주관기관, 시행기관 등
- **(현장성·전문성 강화)** 재외공관 및 해외사무소의 역할 강화* 및 ODA 시행기관의 역량(전문성) 제고** 통한 혁신 기반 공고화
 - * 정확한 현지정보 파악, 현지 네트워크 구축, 현지 관심사업 발굴·점검, 애로사항 해소 지원 등
 - ** IT·보건 등 민간전문가 확충, 대내외 평가역량 강화 등 통해 시행기관의 사업 추진 효과성 제고

IV. 향후 계획

- 새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국회보고 및 공개
 - 제4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본 안건을 국회에 보고하고, ODA KOREA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국민 공개

- 연도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및 재원배분계획에 반영
 - 향후 5년간의 새정부 추진 방향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을 기획·발굴하여 연도별 종합시행계획에 반영
 - 새정부 추진 방향에 부합하도록 연도별 ODA 재원 규모 및 지역별·분야별 운용계획 수립, 정부예산 편성에 반영 노력

- 국제개발협력 세부추진전략 수립
 - 새정부 추진 방향에 따른 지역별(아프리카, 아세안 등) 및 분야별(농업, 교육 등) 전략을 대외정책과 연계하여 수립
 - 민간의 ODA 참여 확대 방안, 시민사회와의 협업 로드맵, 다자협력 추진전략 등 구체적 대책 및 실행계획 마련

※ 사업 심사조정시 패키지화·민관 연계 등 기본방향 및 세부전략에 부합하는 사업 우대

- ODA 디지털 플랫폼 구축 등 추진체계 정비
 - ODA 디지털 플랫폼 구축, 신규 BI 마련, ODA 관련 협회 설립 지원, 제도개선 TF 운영 등 ODA 추진방식 개선 및 제도화 추진